

정부, 화학사고 전담 화학안전과 신설

2014년 방재센터 출범으로 사망 31% 감소 ... 2015년 위험경보제 시행

2015년부터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가 시행되고,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특수차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전국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 1년을 맞아 201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정부 차원의 화학사고 대응에 나선다고 12월30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구미, 서산, 익산, 시흥, 울산, 여수 등 6개 지역 산업단지에 설치돼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2012년 9월 휴브글로벌의 불산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환경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2014년 1-10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된 6개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재난 신고는 86건으로 2013년 1-10월 76건에 비해 증가했지만, 사망자수는 46명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립 이후 사고발생 30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9.7%에서 50.0%로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등급을 분류·관리하는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를 2015년부터 시행한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화학공장 1200곳의 위험징후를 3개월마다 수집·분석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컨설팅과 점검 등 사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화학안전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30>